

이재명 “아무 잘못 없으나 오라니 가겠다”

“주중에는 일해야, 28일에 갈 것” “변호사 1명 대동해 당당 맞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 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 통보 관련 “아무 잘못도 없으나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1월 28일 변호사 1명만을 대동해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정치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를 하느라고 일반 행사 사

건 처리도 못해 미제 사건이 쌓여도 상관없지만 전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수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겠다”며 “27일 아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은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 국정에 충실하시길 바란다”며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늘 우리 검찰은 질서유지를 위해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사적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상인에게 생선을 구입하며 대화하고 있다.

또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며 “공공개발을 포기해 버린 나나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에 개발 허가해 준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배임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등 의혹 관련 “민간 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해 개발 이익을 조금 더 환수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고 규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文정부 정책포럼 ‘사의제’ 창립...친문, 구심점 되나 고문예 이낙연·정세균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 꾸린 정책포럼 ‘사의제’가 발족했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인사가들이 적잖이 참여한 가운데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

정치권 일각에선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18일 오전 사의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의제는 민주당 정부 성과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포럼 성격으로 제안된 조직이다.

상임대표는 박병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동대표는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조대엽 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방정규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맡았다.

정치·행정, 경제·일자리, 사회, 외교·안보 등 4개 분과로 운영 예정인데 각 위원장은 1분과 윤태범 전 지방행정연구원장, 2분과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3분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4분과 위원장은 미정이라고 한다.

특히 고문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참여키로 했다. 이외 전해철, 윤영찬, 한병도, 정태호, 박범계, 고민정, 윤건영 등 민주당 정부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참여해 있다.

사의제는 지난해 여름 논의를 시작해 출범을 두고 20여 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한다.

명칭을 두고서도 여러 견해가 있었는데, 이 중 도종환 의원이 제의한 ‘사의제’가 최종 채택된 것으로 파악된다.

野 3당 “독립 조사기구 구성해 이태원 진상규명 계속”

박홍근 “與, 이상민 방탄 위해 인간힘”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종료된 데 대해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참사의 진상규명은 계속된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독립적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끝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거부할 셈”이라며 “대체 그 어디에 정쟁이 있고 역사가 있다. 이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일 뿐”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일말의 진정성도 없었다는 뜻”이라며 “바로 옆에서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도 국민의 힘은 조지일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방탄만을 위해 인간힘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더니 결국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한번 없이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얻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그 책임 엄중히 물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독립적 조사기구를 국정조사로 채 밝히지 못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겠다”며 “국

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마친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난안전특위를 통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응급 구조 및 대응이 시스텝 아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 재난안전특위 역시 1월 임시국회 안에 설치돼 정부가 제출할 대책을 특위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고 넘치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한 위증으로 법적 책임까지 질 이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유족과 생존자를 향한 정치적 폭력”이라며 “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전했다.

광주 총선 출마자들 포럼 결성-연구소 개설 ‘뽐’

일종의 컨벤션 효과...인지도 상승·지지층 결집 기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입지자들 사이에 포럼 설립과 연구소 개설 붐이 일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와 인지도 상승,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전략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명달이 선거 관리감독 기관도 분주해지고 있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방문머리를 겨냥한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포럼 결성이나 연구소 등 개인 사무실 개설로, 10여 명의 입지자가 이같은 방식

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2월께로 예상되는 당내 경선이나 당 안팎의 각종 여론조사에 대비한 인지도 끌어올리기 차원으로, 정치 신인 뿐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풀뿌리 정치인까지 베이스캠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통상 선거 6개월 전후로 보통은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정책 제언과 새로운 정책짜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 나설 예정인 정진욱 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포럼 광주세상’을 공식 출범하고 ‘총선 열차’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중앙당 정경래 최고위원이 특별강연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피니언 리더, 자치활동가,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젊은 기업인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산을 민주당 경선에 도전하는 정재혁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침대에 ‘광주 혁신 경제연구소’를 열고 올 하반기에 광주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포럼 개최를 준비하며 이를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연구소 개설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 동남갑 출마 예정인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경제국토교통연구소’를 개소했고, 서구갑 출마예정자 중한 명인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지난해 7월 ‘더연 정치연구소’를 설립했다. /김도기 기자

이정선 교육감 “5·18 교육과정 명시” 전국교육감협서 공식 요구...“민주시민으로 교육 의무”

5·18민주화운동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명시돼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이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5·18을 비롯한 민주화 과정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을 삭제한 것에 대한 항의하고 다시·도 교육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안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또 시교육청이 제작한 5·18 교육 영상물 협의회 논의 장에서 상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교과서와 꾸러미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과정



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이는 학생들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의무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석차 타시·도교육감들은 이 교육감의 제안에 공감했으며 추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들은 5·18을 비롯한 민주화 과정이 반영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수정 고시되고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등 민주화 과정 관련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남부지역 가뭄 장기화...대책 상황 등 점검 환경부,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수요관리 대책 등

환경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남부지역 가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가뭄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오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화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영산강 및 섬진강 유역에 다소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담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전에 저수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마련한 수요관리 및 용수

관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영산강 하천수 활용방안 등 중점대책이 보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부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1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 등 10개 시군이 체결한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상황을 살펴보고, 순천, 여수 등 나머지 지자체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는 수자원공사·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절감 목표 달성 시 지원금 지급하는 제도다. /뉴스1

압수수색 반발...민주노총 “공안통치 부활” ‘국보법 위반’ 사상 첫 압색...국정원, 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국가정보원 등이 이른바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데 대해 “공안 통치 부활”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백 명의 경찰 인력과 에어 매트리스까지 동원된 것을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로 규정하며 그 ‘의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예고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 이후 많은 것들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 등 수십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 민주노총 13층 사무실에 진입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A씨의 책상과 캐비닛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나섰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원은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